

# 尹 “헌법 수호하는 기관… 법·원칙 바로 선 나라 만들어야”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공정위 역할, 공정경제 환경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 잘 지키는 것”

“법제처,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 해석·규정 만드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을 예로 들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과 거래처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더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를 향해 “입법과정에 있어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미래변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 대응, 출입국·이민 정책, 반(反)범죄행위 강력 대응, 범죄사 인프라 구축,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경제성장기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의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도 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

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 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 지원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가스 할인 2배로

정부, 117만 가구 대상 한시적 지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도 2배 할인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원~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

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 상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주안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공공요금 인상… 기대인플레이션 3.9% 소폭상승

한은,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 0.5p 오른 90.7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이달 3.9%를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다음달 중 교통요금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가격지수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이 시행되면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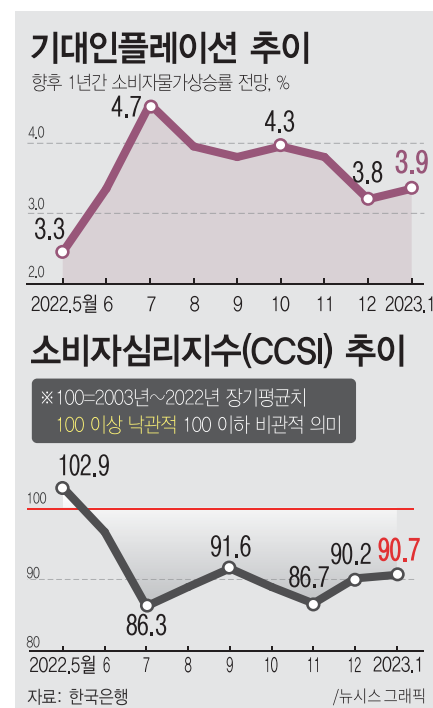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 뒤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지표로,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물가지표다.

근로자가 앞으로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실제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이른바 ‘임금발 물가상승(wage push inflation)’인데,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셈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 들어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12월 3.8%였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 3.9%로 0.1%p 상승했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공공요금이 인상



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글로벌 경기와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불확실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소비자심리도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0.5p 오른 90.7로 나타났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된다.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소비자 심리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리수준전망은 전월 대비 1p 하락한 132를 기록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영향이다.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6p 상승한 68로 집계됐다. /나유리 기자 yu115@

## 교역조건 악화에 실질 국내총소득 1.1% 하락

>> 1면 ‘지난해 韓 경제 2.6%’서 계속

지난해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1%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DP 성장률을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반도체 경기 하락등이 겹치며 수출, 민간소비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줄며 0.4%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늘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0.7% 성장하고,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4.6% 감소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 등이 증가

했지만, 제조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1%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9% 늘었다. 서비스업은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